| 전체세션 5 |

민들레 홀씨처럼, 기본소득

: 국회·판동초·부산·농촌에서 펼쳐진 기본소득 이야기
: 기본소득 제 3의 도약필요, 각종 사회문제 열쇳말로 떠올라야

정리: 한인정
기본소득 연구소

전체세션 5는 한국의 기본소득을 한 자리에 모아냈다. 젤레케(뉴욕대학교 상하이캠퍼스)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 세션에선 기본소득의 실 사례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효과, 기본소득 운동의 방향 등을 논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본 세션에 대한 기록은 각 발표자들의 발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1. 어린이 기본소득 : 공유지의 활성화

군산대학교 이지수 교수는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화로서의 기본소득'에 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공유지에서 발생한 공유부 분배방식으로 활용되는 기본소득이 공유지를 재생산하고 확장하는 '또 하나의 공유화'로 인식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가지고 온 셈이다. 이 교수는 결과를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공유지, 공유자, 공유부, 공유화 등에 대한 개념 설명을 시작했다.

> "공유지는 대지, 바람, 숲, 호수, 바다처럼 누구의 사유재산도 아닌 모두의 것을 말합니다. 물론 현실에선 개인의 것이거나, 국가의 것으로 귀속되어 있지만요. 공유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공유부를 공유, 공동출자하고, 공유지에 대한 권리를 자각하고 주장하며, 이

를 유지·보존하고자 하는 주체들을 말하지요. 공유부는 공유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질적·비물질적 사물thing을 말합니다. 이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건 '공유화commoning'입니다. 공유화는 공유지에서 공유자들이 공유부를 (재)생산, 인식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 팀은 공유화를 중심에 두고 공유지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 교수는 어린이 기본소득을 '공유화'라는 관점에서 살피기 위해서 공유화를 2단계로 나누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금껏 다양한 공유지에서 나오는 공유부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이용하여 얻는 분배로만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공유지에는 숨은 몫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지만, 공유지를 토대로 얻을 수익입니다. 그러므로 공유지 특유의, 공유지에 걸 맞는 분배방식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1차 공유화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1차 공유화는 '공유자들이 공유지를 인식·이용·유지·관리·재생산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2차 공유화는 보다 '공유지 특유의 분배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배를 뜻합니다. 저희는 기본소득이 2차 공유화라고 봤습니다."

이 교수는 공유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전제하고, 공유화 과정을 설명해 줄 사례인 '판동초'에 대해 설명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판동초는 1965년에 개교했으며, 현재는 전교생 36명의 소규모 학

교다. 이 학교가 기본소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학교 매점이 생긴 이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이 교수는 먼저 학교 매점 설립의 과정(1차 공유화)을 설명했다.

> "지역 주민들은 판동초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과 관계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화려한 기억과 달리, 현재 판동초는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떠나면서 문구점, 슈퍼 하나 없게 된 거죠. 위기의 상황에서 교육공동체는 학교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공유지를 지키려는 공유자들이죠. 예를 들어 대안교육을 꿈꾸는 강환욱 선생님, 학교·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학부모, 작지만 강한 학교를 꿈꾸는 교장 선생님, 지속가능한 학교와 마을을 꿈꾸는 동문과 지역주민 등입니다. 이들은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매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매점은 학생들에게 '간식, 재미난 공간, 선택의 기회가 있는 공간'으로 자리했습니다."

이 교수는 매점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점에)못 오는 아이가 계속 못 오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제야 공유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고 마침 '협동조합 연결망'을 통해 들어온 기부금 1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나눌 결심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매주 2천원이라는 어린이 기본소득이 시작된 것이다. 이 교수는 기본소득(2차 공유화)이 공유지를 활성화시켰다고 봤다.

>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평등과 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린이들은 부모로부터 자립할 수 있으며, 대등한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공유지인 매점을 사수하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죠. 그 모습을 본 다른 공유자들도 이런 '공유지'를 지키기 위해 더 큰 책임감을 가졌고요. 그렇게 기본소득을 계기로 후원자가 늘어납니다. 그야말로 공유지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2. 부산청년기본소득 프로젝트: 하고 싶은 노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반

군산대학교 서정희 교수는 부산에서 청년기본소득 프로젝트(월 100만원, 7개월)에 대한 발표[1]를 진행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이 실험은 (기존의 기본소득 실험에 비해) '충분성'을 충족한 실험이다. 최저임금에 가까운 시급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다수인 한국사회에서 100만원은 꽤나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한 참여자의 말을 인용하며 청년들에게 100만원은 (최저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100시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 교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주제들을 도출했지만, 그 중에서도 '기본소득과 노동(근로유인)'의 관계에 천착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1) 부산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는 1기(2021년 6월~12월), 2기(2022년 9월~2023년3월)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진은 이 중에서 인터뷰에 동의한 이들을 중심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했다.

"근로유인은 기본소득을 뜨겁게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기본소득이 근로유인이 된다는 여러 실증적인 연구도 많죠. 하지만 저희 연구진이 주목한 건 기본소득이 주어져도 '일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을 안 하는 지입니다. 이연구질문은 사람들이 노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 복잡한 맥락이 작용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질적연구를 통해 기본소득과 노동 그 사이에 존재하는 수 많은 이야기들을 보고자 했습니다."

서 교수는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받으면서도 노동을 유지하는 이유로 '하고 싶은 일과 연관성', '근로조건이나 사업장에서 긍정적 관계'를 꼽았다고 말했다.

"우리가 만난 많은 청년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은 단순히 임금과 연계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은 자아실현에 가까웠습니다. 청년들은 하고 싶은 일을 얘기할 때 '가슴이 뛴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동을 중지하는 이유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의 간극',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꼽았다고 말했다.

"우리가 만난 청년들 대부분이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한국의 1800만 경제활동일자리 중에 500만개가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기준일 뿐인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참으며'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은 그 일을 줄이거나 그만뒀습니다."

서 교수는 기본소득이 이런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더 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강조하며, 그 매커니즘을 3가지(투자, 터널링, 협상력)로 분류해 설명했다.

"기본소득은 하고 싶었던 일에 투자해볼 수 있는 '실질적 권한'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기본소득을 받으며 얻게 된 여유를 통해 인생의 다른 경로도 보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과 유사한 형태의 노동을 찾아 가는거죠. 예를 들어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격투기 선수를 꿈꾸는 청년이었는데요. 원래 맥도날드에서 일 했는데, 기본소득을 받으며 재활치료도 하고 PT샵에서 일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에 보다 가까워진거죠."

이처럼 서 교수는 기본소득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기 위해선 '노동의 시간' 뿐 아니라, '노동의 내용'을 볼 것을 강조했다. 그제야 기본소득이 노동시간을 줄이냐, 늘리냐는 일차원적인 질문에서

벗어나, 기본소득이 '노동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농어민기본소득이 꿈꾸는 세상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박웅두 공동운영위원장은 농어민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현실에서 농어민기본소득 사례,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소개를 이어나갔다. 먼저 농어민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한 소득 재분배정책을 넘어서는 △ 사회생태공동체 전환의 기초 △ 새로운 사회를 향한 출발점 △ 인간의 생명과 생존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선언'이라는 것이 요지였다.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를 확대·반복해 온 우리 문명은 생태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산업경제와 질적으로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자본집약적 대농 위주의 생산주의 농정에서 생태적 전환을 꿈꾸기란 그야말로 꿈에 불과합니다. 누가 소득 불안정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생태적 전환의 토대라고 봅니다.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은 그 시발점에 있습니다. 가령,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7차 총회에서도 '기본소득의 전환적 잠재력을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로 이행하기 위해선 혁신적 먹거리 정책 수단에 우선 적용'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한국은 농어민수당 도입을 위한 농어민들의 다양한 실천활동이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때가 참 좋지요."

박 위원장은 현실 속 농어민 기본소득 사례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기도 했다. 첫째는, '마을공유지, 울력을 통한 공동생산, 자원공유, 대동회' 등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사회공동체의 사례다. 둘째는, 공유부를 이용한 기본소득의 형태를 구현한 사례다. 공유부를 활용한 사례로는 △ 마을의 공유자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윤을 배분(보령시 장고도 어촌계, 태안군 만수동 어촌계) △ 마을을 기반한 공동사업의 수익을 배분(포천시 장독대 농촌체험마을, 정읍시 송죽(솔티) 마을기업) △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분참여를 통한 이익배당(익산시 성당포구마을, 신안군 태양광·풍력)등이 있다.

세 번째로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경우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역화폐형태로 지급한다. 이 중에서도 박 위원장은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가 직접 진행중인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기대를 드러냈다. 사회실험을 실시하고, 전국에 효과를 홍보해서 말그대로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을 모아내겠다는 주장이다.

>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사회실험은 2023년 4월부터 36개월간 참여자에게 매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라우드 펀딩 및 한 살림, 전국귀농운동본부, 지역운동본부,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등이 마음을 합쳤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 우리는 농민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제야 우리는 실질적 자유를 가지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장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4. 한국기본소득 운동의 정치적 도전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앞선 발표들이 제시한 기본소득을 제도적으로 구현해 내기 위해선 '기본소득 정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기본소득을 사회경제 문제 해결의 실용적 도구로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 가령 기본소득 철학에 기반하여 다른 정치 현안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소득 운동의 주요 역할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셈이다.

오 대표는 '알파고-이세돌'의 격돌이 있었던, 2016년을 기점으로 기본소득 운동의 성격을 구분했다. 먼저 1기(2000년~2016년)는 기본소득을 국내에 소개하고, 이론적 축적, 운동 주체 형성시기를 뜻한다. 이 때는 진보적 연구자, 원외 진보정당 등이 중심이 되어 기본소득을 한국에 소개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기세를 이어받은 2기(2016년~현재)는 기본소득이 제도정치 내 중요 의제로 확산된 시기다. 이 때는 △ 주요 정당이 기본소득 의제를 수용하며 △ 국회에서 기본소득 법안들이 발의되고 △ 지역마다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 "한국 복지체제는 선별복지로 복지에서 소외된 중산층의 불만이 컸습니다. 때문에 무상급식 논쟁이 뜨거웠고, 그런 과정에서 보편복지를 완성하는 정책으로 기본소득이 제안된 것입니다. 물론 또한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의 결합으로 인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움직임도 있었고, 코로나19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은 모든 국민이 기본소득을 경험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오 대표는 국민에게 친숙해진 기본소득이 대선의 주요 아젠다[2]로 떠오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전 정부 개혁 실패의 반작용으로 보수우파 정권이 당선된 상황. 오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 정치세력이 '기본소득 정치 3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본소득 당의 활동을 통해 그 사례를 구체화했다.

> "기후위기, 부동산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로 혹은 각종 사회현안에 적극 연대하는 '기본소득'을 내세우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제야 기본소득이 텅 빈 기표가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쇳말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연대 형성은 따라오는 거고요."

2) 당시 여당 이재명 후보는 기본사회라는 프레임을 통해 '기본소득 연 100만원'을 공약했으며,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월 65만원 전국민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하기도 했다.